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98
----------	-------

발의연월일 : 2025. 6. 13.

발 의 자 : 박지혜 · 이재강 · 이건태
이소영 · 이용우 · 정성호
위성곤 · 김성환 · 허영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위와 같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별도 배정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제한됨.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공동화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업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u><신 설></u>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 ----- ----- ----- -----

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 ----- -----.
---	-----------------------------------